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우걸
시조시인·한국시조시인협회장

가끔 밤하늘에 선을 그으며 떨어지는 유성을 발견할 때가 있다. “아, 또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뜨는구나.” 나는 혼잣말로 탄식한다. 그런 상상력은 물론 역사소설을 읽어 얻은 것도, 무협지를 통해 학습한 것도 아니다. 유년시절 어른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 그런 상상력을 갖게 했다.

어름이 되면 별식을 만들어 함께 먹으면서 식구들은 명석이나 마루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런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끝날 옛 얘기를 해주셨다. 귀신이나 호랑이, 도둑 얘기도 하시고 권선징악의 고전도 스스로 스토리를 꾸며가며 흥미를 돋구어주셨다.

때로 그 이야기 담당이 아버지가 되거나 형님이 될 때면 이순신, 을지문덕, 감감찬 또는 세종대왕, 립권, 간디 등 다양한 인물

한여름밤의 영웅론

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는 그런 영웅들의 얘기를 들으며 꿈을 꾸었다. 가난하기 그지없는 시대의 아이들이었지만 그런 얘기들이 우리들에게 꿈을 갖게 했다. 삭막한 세상을 건너면서 허방에 쉽게 빠지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면 그런 영웅을 닮고 싶었던 소박한 소망 때문인지도 모른다.

영웅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탄생될 수 있지만 대체로 수난의 시대에 나타난다. 주권을 상실한 나라, 민권을 탈취당한 독재 정권, 전쟁과 기아상태에 있거나 민족이 곳곳에 흩어진 불행한 나라,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그 여움을 헤치고 일어서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여 존경을 받게 되는 사람이 영웅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영웅의 탄생을 어려워졌다.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쉽게 명분 없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매스컴의 발달은 한 개인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옹인하지 않고 그 내면을 낱알이 밝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정상적인 나라의 국민들은 영웅이 출현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또 아무나 영웅이라 말할 수도 없다.

토머스 카일라일은 영웅의 조건으로 성실성과 통찰력을 들었다. 그래서 평생 갖지 않겠다는 소신을 실천한 절인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영웅으로 인정하면서도 통찰력이 부

족한 나폴레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견해와 관계없이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동서양이 인정하는 현존하는 영웅이 있다면 누가 그 호칭에 가장 적합한 인물일까? 그 답변으로 만델라를 든다면 나는 기꺼이 찬성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시한 최초의 광선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만델라는 필생의 목적을 성취한 90대 중반의 유네스코 친선대사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지도자로서 남아공 옛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지도했다. 감옥생활 26년 만에 출소하여 62%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자 진실과화해위원회(TRC)를 결성하여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과거사를 청산했다.

지금도 그가 남아프리카의 양심으로 존제함으로써 그 나라 안정의 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흑백차별이 지나쳤던 나라의 민주화와 안정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경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영웅이 과연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화가 많이 진전되어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는 모든 국적이 시스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운영

할 능력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서투른 영웅적 오버액션이 나라의 평안을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적지 않은 충돌이 해마다 일어날 뿐 아니라 상태는 이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집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같이 통일을 열망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군포로의 귀환, 개성공단의 정상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문제 등 적지 않은 현안이 쌓여있을 뿐 특별한 묘안은 없다. 신뢰를 쌓아가면서 상호 협조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경우 좌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또 어떤 새로운 안으로 꾸준한 신뢰를 쌓고, 마침내 한겨레 한 나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통일이 되는 날 철천막 동포는 그 일의 선봉에 섰던 가장 헌신적인 지도자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할 것이다.

그런 영웅의 출현이라면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영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고민하고 땀 흘렸던 우리의 동료일 것이다.

社說

기아차노조 ‘파업 만능주의’ 고집할 텐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광주공장 등 사업장 내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인 19일 이전에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을 한다면 파업을 피할 수 있겠지만 노사간 이견이 큰 데다 추가 협상시간도 촉박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복급 13만498원 인상 외에 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정년 연장과 사내 하청의 정규직화,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해외판매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하루 생산 차질만 5000대에 달해 매출 손실만 2300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하루 생산 차질만 5000대에 달해 매출 손실만 2300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노사간에 들과구를 마련한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와

봉고차 증산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3000여 원을 들여 증산시설을 갖추고 5개월째 설비를 늘리고 있다는 건 기아차도 문제지만 그에 맞춰 시설투자를 한 협력업체와 영업점의 고통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기아차 노조의 요구안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상당수 무리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도 그렇고,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8647억 원 가운데 1조 1594억 원은 달라는 게 가당한 일인가.

노조는 오늘의 기아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노조는 상식선에서 사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아니라면 기아차 불매운동이 일어날 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고 살리기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집체된 일반 고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시 성적 제한을 없애 우수학생 선점을 차단하고, 일반고의 학력저하와 소외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고에 대한 예산지원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교육정책 실패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있어서 보다 진지한 성찰과 본질적인 해결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고 살리기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으로 추진해온 자사고 육성책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교 다양화라는 이를 아래 학교선택제를 부추기고,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던 정책에 백기를 든 셈이다.

그러나 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일반고들은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해도 학생들의 수준차가 커 효과에는 의문”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또 자

사고인 송덕고와 송원고 학부모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180도 바꾸면 누굴 믿고 학교를 보내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상일여고·광주·광주제일고 등 자사고들도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고 위기가 공교롭기까지는 인적 속에서 나온 대책치고는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사고 육성책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교 다양화라는 이를 아래 학교선택제를 부추기고,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던 정책에 백기를 든 셈이다.

그러나 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일반고들은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해도 학생들의 수준차가 커 효과에는 의문”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또 자

의료칼럼



고병관
동아병원 영상의학과 원장

어깨가 아플 때

의 필수 요건이다.

의사의 진찰과 다양한 검사로 통해 어느 정도는 통증의 원인을 예측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검사가 필요하다. 어깨 통증이 있을 시 이용되는 영상검사는 일반 X-선 촬영, 관절조영술, 초음파검사, CT촬영 그리고 MRI 촬영 등이 있다.

먼저 일반 X-선 사진은 어깨관절 전체의 형태와 해부학적 이상, 관절염 여부, 석회화 건염 등을 알 수 있는 기본 검사지만 힘줄, 인대, 연골 등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이 검사만으로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깨관절 조영술은 관절내에 주사기로 조영제를 투입한 후 X-선 사진을 찍는 검사로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지만 전층파열이 아닌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요즘에는 회전근개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절조영술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추가 MRI나 MRI 검사를 하려는 목적으로 더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최근에 어깨질환 검사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검사법은 초음파 검사다. 무엇보다 초음파검사의 장점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높다는데 있다. 어깨관절이 비교적 표층에 위치하고 있어 초음파검사를 하기 용이한데다 여러 방향 자유자재로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관절을 움직여가면서 움직임을 보는 실시간 검사가 가능하므로 정적인 검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상을 찾아낼 수도 있다. 게다가 해상력이 뛰어난 초음파기들이 속속 나오면서 회전근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MRI에 못지않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

회전근개 이상이 대부분 어깨통증 원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깨관절을 검사할 때 회전근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초음파검사를 통해 회전근개 손상의 90% 이상을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파절자가 너무 비만하거나 초음파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CT사진으로는 회전근개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깨질환의 검사에는 널리 활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상이나 슬관절 탈구 환자의 경우에는 관절강내에 조영제를 주입한 후에 CT촬영을 하게 되면 관절순과 같은 관절강내의 구조물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다.

MRI검사는 가장 우수한 해상력과 조직 대조도를 보인다. MRI는 여러 각도에서 관절을 촬영할 수 있으며 또한 검사기법 또한 매우 다양해 회전근개 이상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내부변성에서부터 부분파열, 전층파열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신체에 인공금속 물이 삽입된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어깨통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영상검사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먼저 의사의 진찰 후 상담을 통해 예측되는 어깨 통증의 원인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영상검사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의로운 사람이 행복한 나라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

내 나라에 대한 신뢰감과 애국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할 때 형제들이 품치는 것처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애국심은 살아나게 마련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의 항복 선언을 라디오를 통해 들은 국민들은 비로소 일제 치하 36년간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남산 국기계양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일부는 서울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제 그 박찬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80을 넘은 불독만이 그때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저 공휴일의 하나로 치부되거나, 하물며 광복절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3년 8월 15일, 68주년 광복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할 것이다. 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국민들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권장할 것이다. 하지만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자고 호소해도 아파트 베란다에는 가림막 놓 나뉘듯이 태극기가 내걸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현대의 한국인들에게 광복절과 광복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과 그 후손들을 기억하고 예우하

는 일은 어불성설인지 모른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 광복의 기쁨 뒤에는 얼마나 많은 숭고한 목숨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바쳤는지를,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죽어간 이름 모를 병사들 66년이 지난 뒤에도 기리고 예우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서글퍼진다.

호남인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으려고 희생하고 헌신해 왔다. 떨리는 왜적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호남 민초들의 의로운 역사에서부터 가까이는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5·18 민주화 운동까지 호남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고, 후세 사

람들끼리 공유하고 장려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공동체정신을 이어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전남도는 2008년부터 숨은 의인을 찾아 표창하고 있다. 벌써 275명에 이른다. 지난해 4월부터는 동화혁명에서 현재까지의 지역의 사회운동사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전남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로운 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위에 의로운 일을 하신 애국지사들과 그 후손들이 계시는지 살펴보자. 그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감사를 전하자. 평상시에 존경과 예우를 해드리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아니 그렇게 거창한 대의명분이 아니라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약속감사의 경관만이 남은 사회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이 작지만 숭고한 꿈이 실현되는 날을 에타게 기다린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세법 개정안 때문에 증산층 세 부담만 늘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세(稅)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렸다. 대한민국에서는 증산층의 기준이 연소득 5500만 원이 된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계총량 조사 분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산층은 2124만 원 ~ 637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가족 기준은 1501만 원 ~ 4505만 원이라고 한다.

OECD에서 정의하는 증산층 범위를 알려면 ‘중위소득’부터 파악해야 한다. 전체 가구를 1~100등까지 나열한 뒤 50등인 가구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일컫는다. OECD는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50~150%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를 증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소득 3000만 원인 1인가구와 연소득 8000만 원인 6인가구는 단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OECD는 ‘균등화 소득’ 개념을 사용한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 증산층을 산출하는 개념이다.

여론조사로 직장인들에게 물은 증산층의 기준은 훨씬 높다. 우선 부채가 없는 30평대 이상 아파트 소유, 월급 500만 원 이상, 2000CC 중형차, 예금 잔고 1억 이상 등이다.

증산층의 개념을 한국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만 규정하는데 다른 선진국 가들은 비경제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주장에 꿰뚫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부패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비영리가 놓여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감자에 대응할 것, 불의·불평·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등이다. 프랑스는 외국어 하나 정도 구사해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가질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해 활동할 것 등이 그 범주다.

소득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은 데 반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은 우리 사회에서 증산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논설주간 申洛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점국 2200-66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